

# 靑 “日, 백색국가 제외에 강한 유감”

“지소미아 유지 명분 없어... 안보·경제 연계시킨 일본 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역사 바꿔쓰고 있는건 일본 다자주의 퇴보... 혁신기술 확보하고 강한 안보 구축”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

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게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

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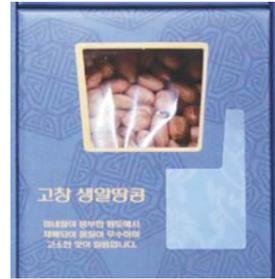
또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가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고창 땅콩, 문 대통령 추석선물 포함

국가유공자·소외계층 포함 1만4000여명에 전달 예정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포함해 1만4000여명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28일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인사말을 통해 “등근 달 아래서 송편을 빚으며 정을 나누고 소망을 비는 추석”이라며 “정성을 다해 삶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보람달처럼 커졌다”고 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는 넉넉한 한가위에 휘영청 뜬 보름달처럼 올 것”이라며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함께 빛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남 서천의 소곡주, 부산 기장의 미역, 전북 고창

의 땅콩, 강원도 정선의 곤드레나물 등 전국 각지의 지역 특산물 4종 세트로 구성됐다.

선물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 구조대원, 강원도 산발 진화 자원봉사자,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전염성질병 방제활동 참여자, 장애인 활동도우미 등을 포함해 국가발전의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후손 모범 청소년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뉴시스

## “교육은 정치적 수단 되면 안돼”

도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 김 교육감 사퇴 촉구 정운천 규탄

김승환 교육감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의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도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회장 이강선)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선거에 이용하는 정운천 의원은 교육3주체에 사죄하고 정치인은 정치에, 교육자는 교육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총선때 정 의원을 지지한 것은 “전북 미래교육의 혼란을 야기하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도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회장 이강선)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선거에 이용하는 정운천 의원은 교육3주체에 사죄하고 정치인은 정치에, 교육자는 교육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으로서 지역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만을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자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한 전북도교육청은 재량권 일탈행위이자 남용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전북 교육 원로들이 자진 사퇴 요구와 주민소환 발의 추진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당정청, “소재·부품·장비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이상 투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대책위 회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협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또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연구

개발)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을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정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1조5000억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 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시스

#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실현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KTX 김제역 정차 실현으로 경제도약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통 예정일 2019. 9. 16**

김제·완주·혁신도시 부안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행횟수 : 1일 4회(상행 2회, 하행 2회)  
 • 운행노선 : 용산-오송-서대전-익산-김제-장성-광주송정-목포  
 • 열차에매 개시일 : 2019. 8. 16(금)

구분	출발	도착	요금
상행	김제 07:01	용산 09:17	32,200원
	김제 18:13	용산 20:37	
하행	용산 09:30	김제 11:45	32,200원
	용산 17:10	김제 19:20	